

# 국민이 세상을 바꾼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문재인정부 '국민청원'은  
국민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국민들이 직접 올린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표하며  
큰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세상을 바꾼, 국민청원 4년을 소개합니다.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지금, 104만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억명이 국민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만 55명이 방문해서, 14만 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눌렀습니다.

### 누적 현황



누적 게시 청원

104만 5,810건



누적 방문자수

4억 7,594만 372명



누적 동의자수

2억 932만 4,050명

※ 2017. 8. 19 ~ 2021. 7. 31

## 국민소통을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부문> 1위  
(2018년, 2020년 연속)

### 하루평균 현황



하루 게시 청원

725건



하루 방문자수

33만 55명



하루 동의자수

14만 5,162명

※ 2017. 8. 19 ~ 2021.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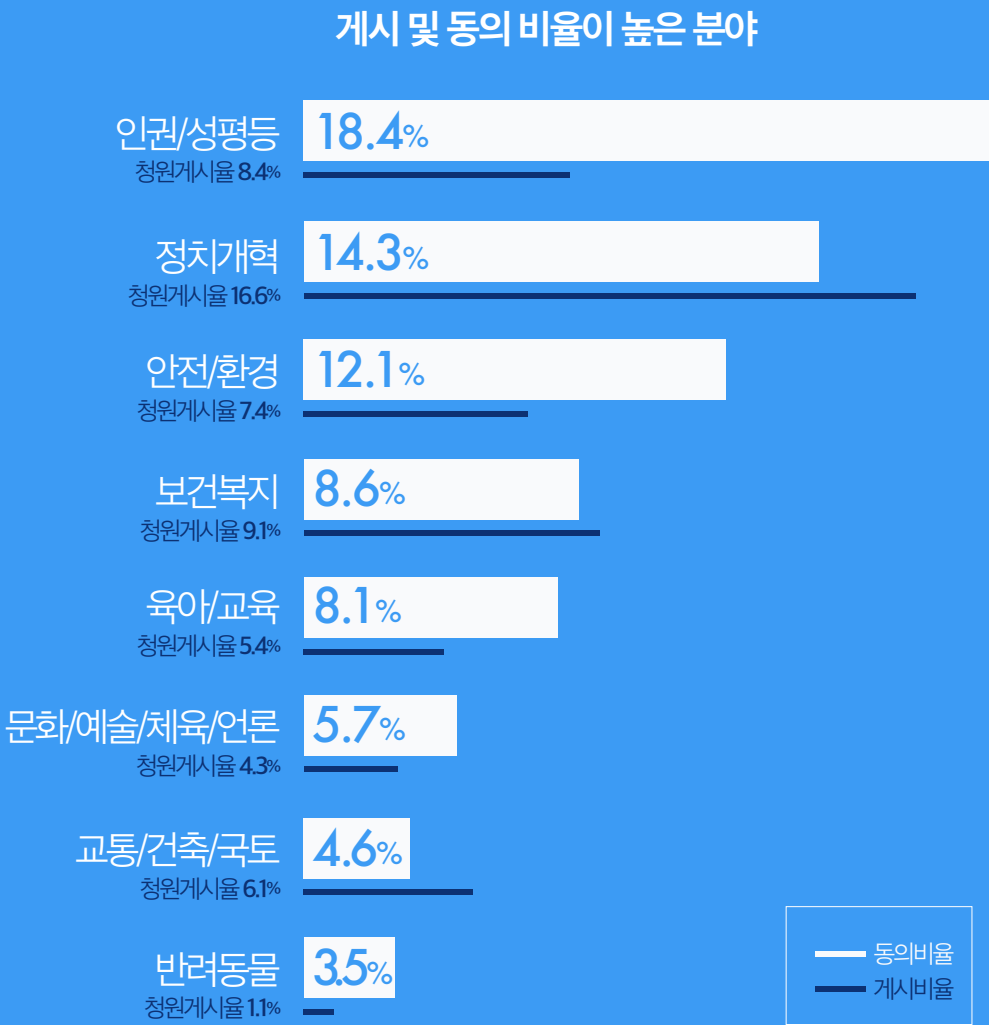
# 인권/성평등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분야\* 18.4%

104만 국민청원 중 가장 등록이 많이 된 분야는 정치개혁(16.6%)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습니다.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 분야였고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입니다.

특히 인권/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반려동물 분야는 게시 대비 동의 비율이 높은 분야였습니다.

\* '분야'는 청원게시자가 글을 작성하면서 17개 항목 중 직접 선택 (분야) 경제민주화, 교통/건축/국토, 농산어촌, 문화/예술/체육/언론, 미래, 반려동물, 보건복지, 성장동력, 안전/환경, 외교/통일/국방, 육아/교육, 인권/성평등, 일자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정치개혁, 행정,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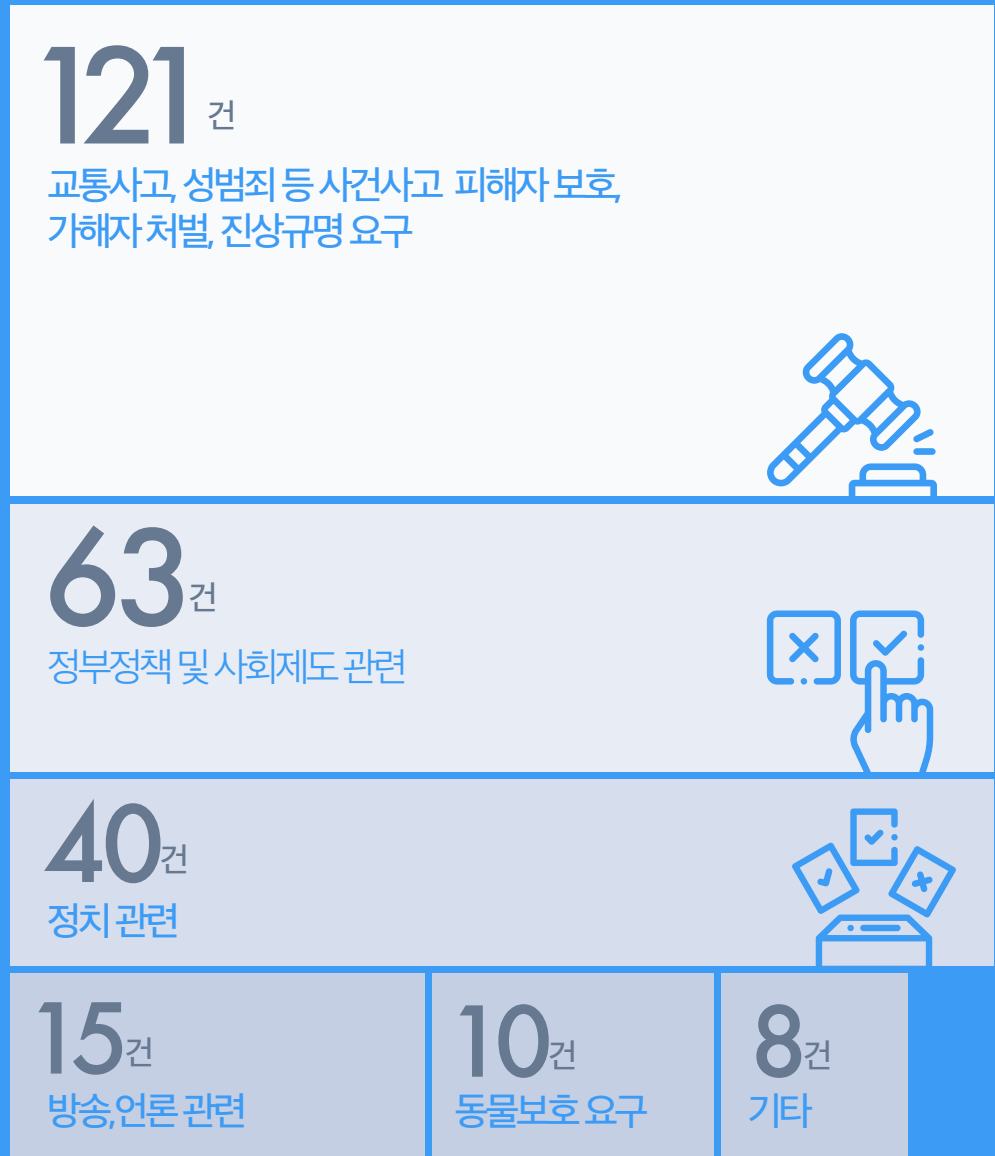


#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255건 답변 완료 (2017.08.19~2021.08.18)

지난 4년간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57건입니다. 257건 중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분야는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으로 121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20만 동의 청원의 47%에 달합니다.

정부의 제도, 정책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토로한 청원은 63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이후에 정치인에 대한 응원, 지지 등의 청원, 방송/언론 관련, 동물보호 요구 등의 청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이웃 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라는 목소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세차레나 신고돼 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랍니다

# 121 건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사자의 불행에 공감하고 더 적절한 처벌, 더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 본인, 가족, 지인이 작성한 청원은 50건입니다.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습니다.

##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 63건

GMO완전표시제  
성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도서정가제  
소방국가직전환 리얼돌 수입 금지  
무고죄 제정 포항지진배상  
난민법 개정 국적법 개정 여성징병제 성소수자 이슈 낙태죄 폐지  
공매도 금지 기후위기 대응 외상센터 지원  
코로나 지원 차이나타운 반대  
실버택배비용 전기생활안전법 개정 양도소득세 폐기 전자개표기 폐지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비혼모지원 정책 마련  
수술실 CCTV설치 영주권자 선거권  
가상자산 정책 변경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레몬법 도입  
주취·심신미약 감형 폐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해주세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금지해주세요”

“GMO 완전 표시제 이행을 촉구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요청”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제도 관련 청원도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건이 63건에 달했습니다.  
청소노동자·비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도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진행되는 제도에 대한 찬반 청원도 많았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다시 한번 각종 의제들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신미약자임의적 감경규정

체육계(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정보공개

동물보호법 강화

노동환경 개선법제도 마련

권역외상센터 확충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소년법 개정 논의

아동학대방지시스템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아동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청원이 바꾼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변화**
- ▶ 아동권리보장원(2019년 7월) 출범 아동관리 통합서비스 실시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등 보호시설 확충
  - ▶ 아동학대 행위자 자격정지 2년 → 5년으로 강화
  - ▶ 대법원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 ▶ 해당 경찰서 부실수사 진상조사 및 징계
  - ▶ 아동학대신고, 지휘·감독 책임강화

위탁모에게 맞아죽은 15개월 딸 애기 좀 들어주세요\* 등  
아동학대 관련 20만 이상 청원 10건

\*2018년 12월, 위탁모에게 맞아 숨진 아동의 친부가 작성한 청원, 22만명 국민이 동의함

세차레나 신고되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등 단일 사건 20만 동의  
이상 청원 5건, 총 131만 국민 동의

\*2020년 10월, 16개월 입양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해자 처벌과 아동학대방지 대책 요구한 청원

##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 변화**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12월)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 ▶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이송조치 의무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5월)
  -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및 적용범위 확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요구 관련 20만 이상 청원 4건

\*2019년 11월, 교통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및 주차장  
사고예방,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강화 등 생명안전 5개 법안 제정을 호소한 청원,  
41만명의 국민이 동의함



##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변화**
-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통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18.12월)
  - ▶ 단속기준 0.05%→0.03% 강화, 2회 적발시 면허취소
  - ▶ 상습운전자 차량 압수
  - ▶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등  
20만 이상 청원 5건

\*2018년 10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 40만 6천명 국민이 동의함

##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 변화**
- ▶ 심신미약자라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했던 조항을 법관의 판단으로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일명 '김성수법' 개정: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임의적 감경규정 변경, 형법 개정/2018년 12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등  
심신미약 감경 폐지 관련 20만 동의 이상 청원 4건

\*2018년 10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희생자 지인이 올린 청원, 119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함

##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대상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변화**
- ▶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
  - ▶ N번방 방지법 개정
  - ▶ 불법촬영물 판매 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도 처벌대상 포함 (성폭력처벌법 개정/2020년 4월)
  - ▶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기준만13살→만16살상향 (형법개정/2020년4월)
  - ▶ 경찰의 기소전 추정정보전제도 도입(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020년 4월)
  - ▶ 피해자 특별지원단, 여성 긴급전화 24시간 피해신고창구 운영 (2020년4월~)
  - ▶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수립 (2020년 4월) 및 대책추진 점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정형 강화, 신고포상제 도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20년 5월)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금지·삭제 의무 (정보통신망법/2020년 5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등  
20만 이상 청원 9건

\*일명 'N번방',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이 다수 청소년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저 수사 및 가해자 신상 공개, 국제수사 공조 등을 요구한 청원, 총 744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함(역대 최대)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 변화**
- ▶ 5만 2,516명 소방공무원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 (2020년 4월)
  - ▶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및 지역별 동일한 소방서비스 제공
  - ▶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병에 특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2024년 개원) 등 처우 개선 계속 추진
  - ▶ 위험직무 순직 인정 등 공·사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2019년 4월)

\*2017년 국가재난 대응과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해, 42년 만에 소방청으로 분리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중요성이 커진 때,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력충원이나 장비 차이가 나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옴.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함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변화

- ▶ 폭언 등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경비원 등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년 3월)
- ▶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사용 근로자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년 7월)
- ▶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입법 예고 (2021년 7월)
- ▶ 범정부 갑질신고센터 운영(권익위),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부여
- ▶ 항만 안전 사고 책임 명확화 등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강화 (2021년 6월)

저희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0년 5월, 44만명 국민 동의)\*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입주민이 사건을 고발한 청원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2021년 6월, 23만명)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군의 친구입니다 (2021년 5월, 총  
9만명 동의) 등 2건

##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습니다

### 변화

- ▶ 동물이용해 도박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2019년 8월)
-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벌칙 상향 (동물보호법 개정/2020년 2월)
- ▶ 동물 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2020년 1월)
-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위한법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2021년 2월)
- ▶ 동사동물(사육 동물) 실험 요건 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2월)
- ▶ 동물학대 행위자에 사육금지 처분 부과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등 개정 추진중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채팅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등 20만 이상 동물학대 고발 청원 10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이를 전시하고 자랑한 오픈채팅방 수사요청 청원으로  
27만명이 동의함

## 권역외상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변화**
- ▶ 닥터헬기 이송환자에 대한 수가 적용 (2018년 7월)
  - ▶ 2017년 10개소 → 2020년 15개소로 권역외상센터 확충
  - ▶ 외상 수가 신설 등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2018년 7월)
  - ▶ 권역외상센터 점검 지원 전담인력 보강으로 정부 관리감독 강화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  
(2017년 11월, 28만명 동의)

## 일본산수산물 검사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변화**
- ▶ 일본 활어차해수 방사능 결과 분기별 공개 (2019년 10월~2021년 6월)
  - ▶ 외국인 운전자 중 상습 위반자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제한(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2020년 6월)
  - ▶ 일본산 수산물 매건 방사능 검사 실시(20년 기준, 2만 4천톤)
  - ▶ 선박평형수 방사능 결과 공표 및 방사능 조사결과 통합 제공 (2021년 7월~)
  - ▶ 부산항만공사 해수 방류처리 시설 운영(2021년 2월) 및 방사능검사 결과 공개(2021년 6월)

---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방류, 무법강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2019년 7월, 21만명 동의)

## GMO 표시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 변화**
-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구성·운영 (2018년 12월~20년 1월, 총 11회)
  - ▶ 이해관계자 대표와 식약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2020년 1월~, 총 9회)
  - ▶ 국내 적용가능한 수준의 GMO 표시 강화 방안 마련 예정 (21년 12월)

---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국민동의 21만명)

##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변화**
- ▶ 체육계 비리전담 독립적 감시기구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년 2월)
  - ▶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조사권한 강화 (2021년 2월)
  - ▶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년 2월)
  - ▶ 선수촌 여성관리자 배치 및 인권상담센터 설치 (2019년 1월)

---

조OO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2018년 12월, 국민동의 26만명)\*

\*체육계 내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행위를 고발한 청원. 특히 폐쇄적·위계적 구조와 성과주의로 인해 체육계 내 폭력행위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요구

##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변화**
-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만14세 미만→18세 미만) 및 금액 인상 (월 13만원→20만원)
  - ▶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
  -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신규 시행, 주거환경 개선
  - ▶ 청소년 한부모 위탁 교육기관 확대 등 자립지원 강화
  - ▶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등 불이익 규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2018년 2월, 국민동의 21만명)

##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20년 7월, 국민동의 21만명)

-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논의 중(2021년 8월 현재)
- 경찰 내 의료수사부서 운영 및 인원 확대
-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 부과(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2020년 4월, 국민동의 100만명) 등 청소년범죄 관련 20만 이상 청원 17건

-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12건 국회 계류 중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수사단계 적용 권고(2020년 4월)
-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 및 소년보호조치 내실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국민동의 23만명)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4월)
- 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개정기한이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 지속
- [정부안] 14주까지 낙태허용, 24주까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사유에 한해 낙태죄 적용 배제(사유에 사회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추가)

# 국민이 보는 국민청원

93%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

63%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 있다

61%

국민청원을 올리는 절차가  
어렵지 않다

80%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국민  
청원

## 국민청원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61%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

62%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

59%

## 실제 성과가 나타난 영역? (중복응답)

성평등·인권 향상과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고발 47%

사회 부조리나 비리 고발과 처벌 43%

교통·노동·의료 사고 고발과 안전대책 36%

13% 일자리 확대 및 민생안정

11% 정책 및 행정 시스템 변화

7%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강화

4% 정치개혁

### 인식조사 개요

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297명(1,200명으로 가중치 적용)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7%p

조사방법 : CAWI/CAMI(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조사일시 : 2021년 8월 6일(금) ~ 8월 9일(월) 4일간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 모든 정부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정부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2022년 말 도입됩니다.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2020년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그동안 '문서 제출'로만 가능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원제도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따른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 소통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곳에 보여준 국민의 폭발적인 참여가 사문화됐던 청원권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 국민청원 동의수 TOP 25 (50만 동의이상)

1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715,626명	20.3월
2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2,026,252명	20.3월
3위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1,900명	19.4월
4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1,504,597명	20.2월
5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1,469,023명	20.2월
6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1,449,521명	20.2월
7위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1,192,049명	18.10월
8위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1,007,040명	20.4월
9위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761,833명	20.1월
10위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757,730명	19.8월
11위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738,566명	19.3월
12위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735,972명	20.7월
13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714,875명	18.6월
14위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670,780명	21.3월
15위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650,579명	20.3월
16위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639,617명	20.9월
17위	조두순 출소반대	615,354명	17. 9월
18위	김OO, 박OO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614,127명	18.2월
19위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596,410명	20.7월
20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571,995명	20.8월
21위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533,883명	20.3월
22위	강OO 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529,144명	20.7월
23위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521,867명	21.5월
24위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519,948명	20.3월
25위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503,472명	20.8월

국민이 만든  
4년의 변화

국민청원



## 국민청원 이렇게 운영합니다

게시



사전동의\*



공개



답변요건충족



30일



20만명 동의



정부 답변(한달 이내)

### \*국민청원 100인 사전동의제

- 청원을 게시하면 사전동의 링크를 제공, 100인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
- 중복청원, 비방, 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 줄이고, 국민 목소리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
-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도입. 국민청원 개편설문조사에서 63.2%가 사전동의제 도입 찬성(총 77,321명 참여)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